

‘한파 정국’ 국회 5대 상임위 쟁점 췌가

FTA 비준-저지 전면전 태세

개혁입법·집시법·방송법 등 곳곳 마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단독 상정으로 본격화된 여야 대치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입법전쟁’으로 확대되면서 최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쟁점법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질 각 상임위를 조망해본다.

◇외통위=정국 경색의 정점에서 있다. 새해 예산안 처리 문제로 여야가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지난 18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의통위에 단독 상정, 정국에 한파가 몰아쳤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비준동의안 상정이 박진 의통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발동 하에 이뤄진 정당한 안건 처리라는 입장이지만, 야당 측에서는 여당이 물리력을 동원, 야당 위원들의 출석을 막았다는 점에서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조속히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착수하고, 연내 본회의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야당은 상정 자체를 무효로 간주하고 있다.

◇정무위= 금융 분야를 다루는 정무위는 이번 여야 대결에서 최대의 격전장이

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인 이른바 ‘개혁입법’이 정무위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당장 주요 쟁점법안으로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은행법 개정안,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산업은행 민영화법, 한국정책금융공사법 등 5개가 꼽힌다.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야당은 ‘천재법적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행안위=시위시 복면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또한 불법시위에 참가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을 금지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과 과거사위원회 통폐합법 등도 쟁점법안이다.

한나라당은 이들 법안에 대한 연내 처리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집시법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은 ‘반민주악법’으로 규정해 상정조차 불허

한다는 입장이다.

◇문광위=최대쟁점은 신문과 방송의 경영 허용을 위한 신문·방송법 개정. 한나라당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문사와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은 20%,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은 49%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반면 민주당은 미디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여론의 독과점 현상을 심화시켜 민주주의의 근간인 여론의 다양성을 위협할 수 있는 ‘악법’으로 결사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법사위=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각 상임위에서 넘어올 쟁점 법안들이 본회의로 가기 전 거쳐야 할 최종 관문인데다 자체 이념법안들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길목을 뚫으려는 한나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민주당간에 일촉즉발의 격돌이 예고되고 있다.

당장 사이버모욕죄 관련 형법 개정안과 ‘폐법 방지법’으로 불리는 집단소송법 개정안, 휴대전화 감청을 양성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사위 소관 이념법안들은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FTA 상정 무효’ 권한쟁의 심판청구

민주당은 21일 한나라당이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단독상정한 뒤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한 것과 관련, 무효임을 주장하는 권한

쟁의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또 비준동의안 소위 회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해 가처분 성격인 효



민주당 이춘석(오른쪽) 의원이 한나라당이 단독 상정한 한·미FTA 비준 동의안에 대해 21일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심판청구 요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력정지신청도 함께 냈다. 심판 청구는 문학진, 박주선, 이미경 의원 등 민주당 의통위 소속 의원 7명 명의로 제출했다.

법률가 출신의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소속 의통위원들이 지난 18일 회의 예정시간 이전에 회의장에 들어가려 했으나 박진 의통위원장은 법적 절차에 맞지 않는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출입을 막았다”며 “이는 민주당 의통위원들의 헌법상 권리인 입법권과 비준동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박위원장이 야당 위원들의 질의권과 법안심의를 제한된 상태에서 회부결정을 한 것은 헌법이 요구한 의사공개 원칙과 다수결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자유선진당 의통위원인 이희창 총재와 박선영 의원이 지난 19일 비준동의안 상정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연합뉴스

국회 폭력·구태... 정치불신 심화

상임위 회의장 점거 계속... ‘성탄절 대화’ 주목

민주당이 주말에도 상임위원회 회의장을 사전 점거하며 이번 주 이뤄질 법안전쟁에 대비한 진지 구축에 들어간 가운데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가 오는 성탄절까지 야당과 최대한 대화를 모색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20일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민주당 전병헌, 천정배, 이종걸, 장세환 최문순 의원 등은 밤 11시부터 분방위 회의장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민주당 문방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언론장악 7대 악법을 국회에 제출해 이렇다할 다수의 힘으로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가대 여당에 대해 끝까지 싸우

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점거한 상임위 회의장은 문방위, 정무위, 행안위 등 3개로 늘었다.

정무위는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된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 등을 반대하는 민주당 홍재형, 이상남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과 보좌진 등 30여명이 진을 치고 있으며 행안위에는 민주당 강기정, 최규식 의원과 보좌진 등 20여명이 회의장 안에서 바리케이드를 치고 22일로 예정된 쟁점법안 상정에 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경권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점령군처럼 의정실과 상임위원장을 점거하고 있다”며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으며,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21일 이번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 “25일 성탄절까지 각급 채널을 통해 야당과 최대한 대화를 모색하겠다”고 밝혀 쟁점법안을 놓고 여야 간의 극적인 타협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우리는 이 기간 야당과 원만한 대화를 통해 타협의 정치가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또, 홍준표 원내대표도 “전쟁 중에도 양국끼리 만나”고 언급한 뒤 “야당과 협의해서 법안 처리를 하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며 내일부터 25일까지 야당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뉴민주당 플랜’ 윤곽 중도 개혁 대신 ‘새로운 진보’

대안야당의 정체성을 고민해온 민주당이 새 이념좌표와 정치노선을 담은 ‘뉴민주당 플랜’의 윤곽을 잡았다.

민주당 내 뉴민주당발전위원회는 최근 뉴민주당 선언 초안을 작성, 최고위원회에 보고한데 이어 조만간 초안을 확정된 뒤 본격적인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중도개혁 대신 새로운 진보=비전위는 당 노선을 현재 강령에 규정된 ‘중도개혁’ 대신 ‘새로운 진보의 길’로 제시했다. 비전위 논의과정에서는 역대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채택한 중도주의를 제외할 것인가가 최대 쟁점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비전위는 중도라는 용어가 뚜렷한 가치지향을 담고 있지 못하다는 자

칫 보수정당의 노선과 다를 바 없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개혁이란 단어 역시 열린우리당 시절 비생산적인 ‘실용 대 개혁’ 논쟁을 연상시킬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했다.

대신 비전위는 보수의 가치를 표방하는 한나라당과 명확한 대척점을 형성하는 당 노선을 사용하는 정공법을 썼다. 다만 새로운 진보는 올 초 민주당의 전신인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전 대표가 개인적으로 제시했던 노선에서 일부 부정적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전과 가치도 변경=비전위는 민주당의 비전을 ‘중산층과 서민이 도약하는

민생제일주의 경제’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모두를 위한 번영’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또 민주, 개혁, 번영, 통합, 평화, 환경, 행복 등 7대 가치도 기회, 정의, 공동체라는 3대 가치로 변모시켰다.

성장처럼 진보진영이 관심이 없다고 치부돼 오던 영역에 적극 도전함으로써 보수의 영역에 침투하자는 뜻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5대 핵심정책 목표를 정하는 과정에서는 녹색에너지를 명문화할지 여부가 논란이 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정책 중 하나여서 제외하지는 의견도 있었지만 오히려 민주당의 철학에 더 부합한다는 견해가 우세했다.

/연합뉴스

“점대비 실명제 폐지 즉각 철회하라”

민주당 이용섭 의원

민주당 이용섭(사진) 의원은 21일 정부가 내년부터 50만원 이상 점대비 지출시 그 내용을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의 ‘점대비 실명제’를 폐지키로 한 데 대해 즉각 철회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위기를 맞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기업들에게 점대를 권장하는 한심한 정책으로, ‘점대 공화국’으로는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소액분할 결제 등이 문제라면 보완

하면 될 일이지, 번칙 운동 때문에 점대비 실명제를 없애려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이자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04년 점대비 실명제 도입 당시 국제청장으로 이 제도 시행을 주도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유네스코 인정 정규 대학교

한의대 유학! 국내에서 가능!

SCU한의대

캐나다, 미국 한의사가 될수있습니다!

www.scukorea.com

문의전화 010-6834-6253

취업 고민해결! 아메리카대륙에서 성공을! 입학상담/설명회 매일 오후 3시, 4시

= 겨울방학을 맞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프로교수진 총출강! 합격의 확신을 드립니다. =

7.9 급 공무원 특강

30주부특별반, 40주야간 생활리깅중, '09년 시험안내

행교세관감법검마철출교보보복전소기단, 정육무세사원찰약공판정전호지산방술과, 10기가능직렬

개강 1월 2일 (주·아·연·모·전) (현재예약중)

내년 소방직(사·도·별 채용인원)

서울 225명, 부산 72명, 대구 81명, 인천 259명, 광주 90명, 대전 78명, 울산 82명, 경기 250명, 강원 60명, 충북 110명, 충남 128명, 전북 30명, 전남 50명, 경북 171명, 경남 135명

www.mdgosl.co.kr 222-4560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44년 전통 • 광주지역 최다 합격자 배출!!

본원출신 전국수석 (총연평균 평균 96.7점)

최강의 교수진! 저자적강!

주택관리사 "2009년 9월 시험 예상" 첫진도 개강 1월 2일

광주고시학원

첫진도 (기본서 이론) 개강 1월 2일

직업인을 위한 고용보험 환급과정

본원 ☎ 227-8003 전라도 맞은편 3층

국비지원 개강원 매강

첨단원 ☎ 971-0002 광주은행 첨단점 4층

새롭고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공인중개사 시험은 역시 새롭!! 19회 시험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전국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50명의 출제 위원급 교수진과 45개 학원 네트워크를 통해 합격시키는 강의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목표점 개강 1월 2일

하당구 목포기독병원 앞 대성학원 3층 건물 (061)277-8111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전국 45개 학원체인) •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질하는 학원 1위 • 선배합격자들이 추천한 1등학원 • 인문과 신리를 주는 학원 1위

합격을 1위 전국수석합격

새롭고 행정고시학원

서구점 ☎ 361-8111

농성동 시구청 앞 광주은행 건물 2층

북구점 ☎ 268-8111

학장이전, 오차동 북부경찰서 건너편 새롭빌딩 4층